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우습게 보는 이유

태평로

최원규
논설위원

웬만한 사람도 법정에선 주눅 들기 마련이다. 유·무죄가 갈리는 형사 법정에선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별로 긴장하지 않는 듯하다. 재판에 지각하고, 법정에서 가끔 하품도 한다. 단식 직후 열린 대장동 사건 첫 재판 때는 "앉아 있기도 힘들다"며 재판을 일찍 끝내고는 국회로 가 표결에 참여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선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고 해놓고 국감장엔 가지도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다. 보통의 피고인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 근저엔 거대 야당 대표라는 특권의식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들도 이러지는 않았다.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는 이 대표가 지금 자기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 판사들이 1심 선고를 못 하고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보자.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이 이뤄졌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건이다.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니다. 그런데 기소 1년이 넘었지만 재판은 절반밖에 진행되지 않아 내년 초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이미 위법 상태인데 재판부는 재판을 서두르려고 하지도 않는다.

더구나 법원 인사철인 내년 2월 이 사건 재판장은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법원은 사무 분담 내규 등을 통해 형사합의부 재판장은 통상 2년, 배석판사는 1년마다 교체해왔는데 이 사건 재판장이 내년 2월 교체 대상이라는 것이다.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꺼리다 보니 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거의 예외 없이 이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니 이 대표가 지금 재판부에 긴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李 사건 재판부, 내년 2월부터
1심 선고 못한 채 대부분 교체될 듯
'재판장 2년마다 교체' 내규 때문
그러니 李가 재판부 농락하는 것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장도 내후년 2월 교체 대상이다. 먼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사건 재판은 시작 단계다.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재판장 스스로 "1~2년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 이 사건 재판장도 내후년 2월까지 1심 선고를 못 한 채 교체될 수 있다.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도 내년 2월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다 바뀌는데 그 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한다. 판사들이 '재판 구경'만 하고 떠나는 '폭탄 돌리기'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다른 재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무책임한 일이다.

재판장이든 배석판사든 한 명만 바뀌면 재판은 '공판 갱신'을 해야 한다. 이미 이뤄진 공판을 다시 하는 것인데 앞선 재판을 간략히 요약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피고인들이 이전 재판 녹음 파일을 다 듣자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거부할 방법이 없다. 대장동 민간 업자 재판 때도 배석판사들이 바뀌자 법정에서 두 달가량 주요 증인 신문 녹취 파일만 들었다. 이 대표도 재판부가 바뀌면 이를 요구할 테고 그러면 재판은 더 늘어질 것이다.

과거엔 판사들이 중요 사건을 맡으면 교체 시기가 돼도 사건을 해결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 판사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다. 지금도 법원 사무 분담 내규엔 중요 사건 처리 등을 위해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 때부터 판사들 눈치 보느라 거의 예외 없이 교체 시기를 지켰다고 한다. 사법 정의가 아니라 판사들만을 위해 사무 분담을 짜고 인사를 한 것이다. 그게 지금의 '폭탄 돌리기'로 나타나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김준의 맛과 섬 [166]

부산 물메기회

부산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일이 끝난 후 헤어지기 아쉬워서 남포동을 찾았다. 주말이라 오가는 사람이 많다. 새벽시장 길목에 있는 허름한 횟집에 들어섰다. 주인이 늦은 점심을 먹다 반겼다. 겨울철에 맛이 가장 좋다는 줄가자미회를 원했지만, 풍랑으로 조업을 나가지 못해 횟감이 없어 아쉬웠다. 대신 물메기를 선택했다. 으레 시원한 물메기탕을 생각하는데 지인은 회로 주문했다. 활어를 남다르게 사랑하는 지역이라서일까. 아니면 복국을 사랑해서일까. 메뉴에도 없는 물메기회를 주문했다.

물메기는 꼼칫과 어류로 겨울에 통영, 남해, 거제, 고성, 여수 등 남해 해역과 군산, 서천 등 서해에서도 잡힌다. 남해 해역에서는 통발로 잡고, 서해에서는 조차를 이용해 그물로 잡는다. 어류도감에는 꼼치라 하지만, 어민들은 물메기라 부른다. 통영에서는 미기라고도 한다. 미기는 메기를 이르는 사투리이다. 물메기는 가격이 저렴해 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값이 헐하지 않다. 산지에서만 즐기던 물메기는 이제 명태를 밀어내고, 전 국민 겨울 생선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물메기회를 처음 맛본 곳은 통영 추도라는 섬이다. 회무침을 준비하다 몇 점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오롯이 물메기회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식감은 씹을 것도 없고, 맛은 심심하다. 그런데 중독성이 있다.

물메기회를 담은 접시가 바닥을 드러낼 즈음에 회무침을 내왔다. 주인에게 원산지를 물으니 통영에서 가져온다고 답한다. 미나리와 무 등에 두툼한 살을 넣은 회무침도 큰 사랑을 받는다. 회무침이든 회든 물메기는 도톰하게 썰어야 한다. 마무리는 뼈와 머리를 넣고 끓인 물메기탕이다. 겨울 무와 겨울 물메기가 만나는 탕의 시원함은 어느 생선도 따라가지 못한다. 회무침도 그렇지만 물메기회는 신선하지 않으면 맛보기 어렵다. 한때 못생겼다고 외면을 받았지만 회와 무침과 탕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어 참 좋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민주당 의원들도 "수술해야" 정치권 상속세 개편 속도 내길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상속세 완화에 반대해 온 민주당에서 상속세 완화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민주당 의원들과 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 제도를 폐지하면 기업가 정신이 고양되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스웨덴처럼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자"고 말했다. 자본소득세란 자산을 상속할 때 바로 과세하지 않고 상속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민주당 황희 의원도 "최대 60% 상속세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되고, 중소기업 경우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기도 한다"면서 상속세 완화 또는 일부 폐지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상속세를 부과할 때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세액 공제해 줘야 한다"면서 상속세 완화안을 제시했다. 합리적인 견해다.

한국의 상속세는 세율(50%)이 너무 높은 데다, 최대주주 할증(20%)까지 있어 최대 60%까지 부과된다. 단연 세계 최고 세율이다. 상속세를 세 번 내면 경영권이 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징벌성 세금이 됐다. 상속세를 세 번 내면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국가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면 그것은 자유시장경제도 아니다. 거의 국가의 약탈과 다름없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국 중 스웨덴·노르웨이·캐나다 등 15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상속세율은 13% 수준이다. 상속세율이 55%인 일본 경우 2018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 승계 특례 제도를 운영해 충분한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세금 폭탄' 상속세는 가업 승계를 방해하고, 경영권 방어 비용을 높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일본엔 100년 이상 장수 기업이 3만3000개, 독일엔 4900개나 있는데, 한국엔 7개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가업 승계 공제 적용 대상을 연 매출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업 대주주들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지만 경영권 문제 때문에 팔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 삼성그룹 대주주들은 그래서 은행에서 엄청난 빚을 내고 있다. 빚내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것을 세금이라고 할 수 있나.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자본이득세로의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에서도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하루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속세 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을 이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줘 더 많은 이익을 내게 하면 상속세의 몇 배, 몇 십 배의 법인세를 내게 돼 사회 전체적으로도 훨씬 더 큰 이익이 된다.

막말이 일상과 상식이 된 정당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현 정부를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에 빗대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썼다"며 "군부 독재와 지금의 검찰 독재는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과 국민이 선거로 뽑은 정부가 어떻게 같을 수 있나. 다른 곳도 아닌 국회 장악 정당의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믿기가 힘들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계엄 저지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상 계엄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 요즘 한 정치 영화의 흥행에 올라타려 괴담을 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괴담성 발언은 너무 잦아 일상이 된 느낌이다. 이재명 대표부터 "(현 정부가)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 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했다. 북풍은 남과 북이 짜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금 남북 관계에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설사 누가 그런 일을 꾸민다 해도 거의 즉각 폭로될 것이다. 그런 사실을 이 대표가 잘 알 것이다.

의원들의 막말도 수위가 높아졌다. 최강욱 전 의원은 "암컷이 설친다"는 발언을 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 그 말을 듣고 같이 웃었던 민형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발목 때기'를 분질러 놔야 한다"고 했다. 이들이 막말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이유는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반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말을 거칠게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황당한 선동을 할수록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고 후원금도 늘어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8일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며 "당이 죽어간다"고 했다. 이원욱 의원도 "민주당은 지금 방탄이 원칙이 됐고, 막말은 상식이 됐다"고 했다. 두 사람은 한때 당대표, 원내수석을 맡아 당을 이끌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했겠나. 당대표는 당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갈 책임이 있다. 당 내부의 개탄을 이 대표가 새겨듣기 바란다.

동영상 사설

저급 주사파 '경기동부' 출신이 또 민노총 장악

3년 임기 민주노총 위원장에 양경수 현 위원장이 선출됐다. 조합원 수가 100만명이 넘는 조직에서 불법·강경 투쟁을 일삼아온 세력이 연임하게 된 것이다. 양 위원장은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주도 세력이자 대표적 종북 단체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경기동부'는 경기도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뒤늦게 등장한 종북 주사파 그룹으로 운동권 내에서도 저급하다고 평가돼온 세력이다.

이들은 통진당 해산 이후 집요하게 노동계에 파고들어 택배노조, 건설노조 등을 장악하는 등 민노총을 정치적 재기의 발판으로 삼았다. 정치권에서도 지난 4월 통진당 후신으로 평가받는 진보당 깃발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 의원을 당선시켰다. 민노총을 장악한 다음에도 종북적 성향을 감추지 않았다. 민노총 전 조직국장이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도 '탄압' 운운하며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북한의 지옥 같은 실상이 다 드러난 지금 경기동부 같은 저급하고 퇴행적인 주사파 조직 출신이 아직도 민노총을 장악하고 있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 과격하고 불법적인 노동운동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사관계 법치주의를 더욱 강화해 이들의 불법 시위, 종북 활동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민주노총의 시대착오적인 투쟁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미 주요 사업장에서는 합리적 요구에 중점을 두는 젊은 조합원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이 경기동부 같은 낡은 세력을 대체하고 노동 현장의 주류로 떠오르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재용 5년 구형에 대한 울화… "화난다, 삼성 옮겨라"

뉴데일리 newdaily.co.kr

대기업을 왜 '혁명적 타도의 대상'으로만 보는가? | 대기업이 왜 '시기·질투·증오·저주'의 대상인가?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알량한 법

울화가 치솟는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5년 구형을 받았다. 3대에 걸쳐 한국의 경제적 삶을 **[뽕밭에서 바다(桑田碧海)로]** 업그레이드 시킨 삼성이 이제 와 듣는 소리가 기껏 **"5년 징역 살라"**고?

법인가? 고무줄인가?

필자는 젊었을 때, 법의 절제보다는 법의 과잉에 세 차례씩이나 경을 친 적이 있다. 매번 ▲소급법(遡及法) ▲포고령 ▲계엄령 ▲비상 군재(非常軍裁)로 혼이 났으니 말이다.

이래서 필자는 혼자서 읊조리곤 했다. "이게 법인가? 멋대로인가?"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정치 잡범]**들에겐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하면서도 잡아넣지도 않고, 그렇게 한없이 관대할 수 있는가? 팽팽했다가 느슨했다가 하는 걸 보면, 사법(司法)이 아니라 무슨 고무줄?

대기업 없이 대한민국 존속 가능한가?

이재용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선제적 대비가 필요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그래서 합병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한 통화 내용이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되는 것에, 허무를 느꼈다. 내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한 적 없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없이, 한국인들이 오늘날 같은 의식주를 향유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도 이 나라 일각엔 언제나 대기업을 혁명적 타도의 대상으로 치는 ▲**시기** ▲**질투** ▲**증오** ▲**저주**가 있었다.

중소기업 위주로 가자는 대통령도 있었다. 중소기업으로, 반도체 포항제철 현대자동차가 가능했을까?

박정희·이병철·정주영·이건희가 이룩한 '한강의 기적'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1978년인가, 처음으로 외국엘 나갈 수 있었다. 프랑크푸르트 어느 광장엘 가봤다. 그 순간 필자는 머리를 꽝하고 얻어맞는 기분이었다. 거기서 필자는 한국을 보았다. 바로, **삼성 현대 LG** 등의 대형 기업 광고였다. 오!

헐벗은 전쟁고아 사진으로나 소개되곤 하던 한국은, 그 무렵 이미 **[전혀 다른 한국]**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이건희 정주영** 창업주들이 이룩한 5000년 만의 **[한강의 기적]**이었다.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자는 자들

그런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의 번영하는 시대가 "**이재용** 피고를 5년 징역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논고했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탄핵 정변 와중에, **삼성**에 대한 흉흉한 괴담이 나돌았다. 대북사업을 끝끝내 하지 않은 **삼성**, 민노총 같은 정치노조에 방어적이었던 **삼성**을, **[해체] [공기업화] [주인 없는 회사로 만든다]**는 설들이었다.

이재용 회장에 건의하고 싶다. **삼성**을 닫고 회사와 공장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옮기세요. 여긴 **삼성**이 아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상속세도 이렇게 높아서야 원. 다 빼앗아 나눠 먹겠다니,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필자도 이런 말이 홧김에 지르는 비명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화나는 것도, 사람에겐 주관적으로 중요하다. 왜, 난 화도 못 내고 사냐, 엉?

류근일 칼럼 더보기 ▼

일부 언론, 왜 바른미래당 출신 띄우는가… 탄핵동지 '이준석 일병 구하기'인가?

한동훈의 문법에 열광한다… '중간' 없고 '단칼' 있기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11월 26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61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